

# 도, 농생명 산업화 공공기관 추가 유치 나서

### 농협·마사회·보험금융원·식품안전정보원 이전 시 농생명 벨류체인 완성 전북자치도, 농생명 공공기관 유치 총력... 전북에 농생명 전 과정 집적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농업정책보험금융원·식품안전정보원 등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국가식품클러스터·한국식품연구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농생명 연구 기반을 갖춘 만큼, 이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유통·금융·안전관리 기능을 한데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2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1차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종자·미생물·기능성식품·스마트농업을 아우르는 농생명 연구·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 기반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 성과와 현장에 연결할 유통 기능, 산업 리스크를 완충할 정책금융, 수출을 뒷받침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농협중앙회' 유치를 겨냥해 전북은 농촌진흥청 4대 과학원(국립농업

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이 집적된 농생명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연구 성과가 현장에 빠르게 닿으려면 전국 단위 유통·보급 네트워크를 갖춘 농협과의 연계가 선결 과제다. 농협이 이전하면 종자·미생물·첨단농업 분야 성과가 농협 유통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산지 중심 수급 예측·가격 안정 시스템 실증과 디지털 생산·유통 혁신모델 보급도 탄력받을 수 있다. 바이오 특화 금융모델 개발과 바이오벤처 글로벌 스페일업 생태계 조성도 기대 효과로 꼽힌다.

'한국마사회' 유치를 두고는 전북이 2018년 지정된 말산업특구(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를 바탕으로 사육·조련·승마·재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마사회가 이전하면 전주 축산 R&D, 익산·정읍 동물용 의약품 기반, 새만금 복합레저 단지

를 연계해 생산(1차)·사료·용품(2차)·경마·관광(3차)이 결합된 말산업 전주 클러스터로 완성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실현이 어려운 말목장·테마파크 복합 조성도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를 통해 가능하며, 재확합·치유농업 연계 웰니스 관광 상품으로 농생명·레저·관광 융합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놓고는 전북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원료·가공·유통·수출 벨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지만, 리스크를 관리할 정책금융·보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이전하면 클러스터 전 단계에 보험·보증·금융 지원 체계가 접목돼 K-푸드 수출경쟁력 강화와 스마트 물류 허브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모태펀드와 크라우드펀딩을 결합한 펀드테크 스타트업 자금 지원, 영농형 태양광·농업 RE100에 대응하는 농

업 보험·금융 표준모델 구축도 전북에서 선도할 수 있다.

'식품안전정보원' 역시 전북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기업 집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식품안전·품질관리의 현장 실증에 최적의 환경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이전하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디지털로 연결된 K-푸드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하며, 한국식품연구원·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산물 위해요인 데이터와 AI 예측모델 실증도 앞당길 수 있다. AI 기반 위해 예측·스마트 HACCP·이력 추적 고도화로 푸드 세이프티 테크 역량을 강화하고,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와 연계해 수출형 식품 안전 인증 거점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치가 실현되면 연구에서 금융·유통·안전관리까지 농생명 산업 전 과정 한 지역에서 작동하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북으로의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0만호 기자

# 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장점검...사각지대 없는 지원 총력

### 찾아가는 신청 확대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21일 기준 64.7%로 지급률 전국 상위권·기한 내 사용 독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2일 익산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지급 초기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비해 접수와 지급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까지 혜택이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접수 체계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고창과 정읍에 이은 세 번째 행보다. 도는 고유가 장기화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군별 집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급 초기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혼잡, 선불카드 재고 부족, 절차문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12만 2,903명이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22일 익산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되나, 1차 지급 대상자는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돼 보다 빠르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 운영해 접근성도 높였다.

2차 지급 나흘째인 21일 기준 지급률은 64.7%를 기록해 전국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2번째로 빠른 집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번 재원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지역 내 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유가가 불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찾아가는 접수와 밀착 대응을 강화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받은 혜택을 사용하기 내 지역 상권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0만호 기자

# 도, SAT1형 구제역 선제 대응 운힘

### 백신접종 관리 강화·취약농가 집중관리·예찰 확대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제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접종 관리 강화와 취약농가 집중관리, 예찰 확대 등을 포함한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1~2월 인천·경기지역에서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구제역 발생과 중국 등 해외 발생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백신접종 누락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SAT1형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해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SAT1형 구제역은 국내 발생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국내 사용 중인 O/A형 백신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소·염소에 대해 연 2회(3월·9월)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폐지는 사육단계별 수시접종 체계를 유지한다.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개체별 접종 여부를 관리하고, 집

중 누락·유예 개체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항체양성률이 낮은 시군과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예찰을 확대한다. 12개 월령 이하 소에 대한 취약개체 검사 비율을 높이고, 백신 구매부족이나 접종정보 등록이 미흡한 농가에선 특별점검과 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농가와 가축시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점검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농가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오는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 권역별 순회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자단체·축협·방역기관과 협력해 대면 교육과 SNS·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부 접경지역인 인천·경기·강원지역 11개 시군과 도내 축산연구소·종축장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SAT1형 대응 1·2차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오는 9~10월에는 군산·김제·고창·부안을 포함한 전국 사해안 지역 28개 시군까지 접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0만호 기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 선정

### 전국 총 4곳 중 완주군 선정... 도·완주군·전북연구원 협업 성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완주군 오성현목마을 일대가 최종 선정돼 연간 총사업비 138억원(국비 60억, 도비 18억, 군비 6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12개 권역자체가 참여할 가운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4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완주군이 포함된 것은 전북 관광정책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선정된 사업은 체계를 품는 K-풍류의 성지 풍류도원(風流桃源)을 주제로, 오성현목마을과 오성계 일원을 중심으로 풍류 콘텐츠 강화,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프리미엄 관광 브랜드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38억원(국비 60억, 도비 18억, 군비 6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통한옥과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예술·미식 콘텐츠가 융합된 지역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상설 공연·전시 및 미디어 콘텐츠 운영 △시 기반 관광안내 플랫폼 구축 및 풍류 스테이 조성 △프리미엄 관광서비스 및 미식 특화프로그램 개

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K-풍류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방한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를 견인하고, 글로벌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국제적 관광거점으로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조성을 넘어 △지역주민 참여 기반 관광생태계 구축 △민간 중심 운영체계(거버넌스) 확립 △지속 가능한 관광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주도형 관광개발 모델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공모 준비 초기 단계부터 전북연구원 및 완주군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기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해 왔다.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방향성과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보완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공모 선정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노력을 지속해 왔다.

/0만호 기자

도지사 후보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맞아

# 이원택 "체감 성장으로 계승" 김관영 "실용주의 정신 잇겠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이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전북의 체감성장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꿈은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현대차 9호 전북부차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AI 3대 강국, 재생에너지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재편되고 있는 이때 전북은 그대로 멈출 것이냐 기회를 잡아 미래를 바꿀 것이냐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전북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려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여 전북의 몫을 끝까지 쟁길 집권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승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도민적 신뢰와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전북도민이 체감하길 희망하며 "전북도민이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북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여 전북의 몫을 끝까지 쟁길 집권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짓이 진실을 가려내는 현실 속에서도 전북도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 전북에서 '진짜 노무현 정신'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진짜 노무현 정신을 전북 땅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고인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편한 길과 거대 정당의 울타리를 단호히 거부했던 '바보 정신' 때문"이라며 "오직 국민을 믿고 외로운 자갈밭을 걸었던 무모한 정의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진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현 전북 선거판을 둘러싼 기득권 정치의 폐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던졌다.

그는 "오늘날 정치는 맹목적인 진영 논리, 내 편에게만 관대한 이중 잣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낙인찍기가 지배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경계했던 야만의 정치가 현대판 비준 채 도처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국익을 위해 갈단했던 노 전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신'을 잇겠다"며 "중앙 정치의 눈치가 아닌 오직 도민의 눈치만을 보며 전북의 실익을 위해 실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짓이 진실을 가려내는 현실 속에서도 전북도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 전북에서 '진짜 노무현 정신'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 "도민 알권리 위해 현장 소통 강화"

### 도, 26-29일 주요 일정 발표... 하수관거 정비 현장 등 점검 삼성전자 퇴직 전문가 활용한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도 소개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 (사진)은 지난 2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6일부터 29일까지 추진될 도청 주요 업무와 현안 일정을 설명하며 '현장 중심 행정과 도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우선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5월 1일부터 재난 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28일부터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8일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남원 소재 조사료 가공 공장을 방문해 중등 정제 불완전 따른 건조·육수수 등 사료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같은 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27일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남원 산동면 산사태 우려 지역 현장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사업 확대에 따라 체류형 거주 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반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333명이며 학부모를 포함한 인구 유입 효과는 7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부안 해역에는 총 28억원을 투입해 해양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사업이 추진된다.

28일에는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지방세 연찬회가 열린다. 전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여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발표 및 우수발표자에 대한 시상식도 실시한다.

이 대변인은 "현장 공무원들이 지방세 제도 개선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또 피지컬 AI 산업 대응 전략과 관련해 산업기술진흥원 및 과학기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획 보도 자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국은 현대로템 무주 사업과 연계한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100여억 규모 SOC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9일에는 곡성 세계 장미축제와 연계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과 특별자치도 품질보인증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품질보인증 경진대회는 공정 개선과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이밖에 임실군은 오는 28일부터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장미축제를 개최한다. 이는 사계절 관광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봄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여름 물놀이 축제, 가을 국화축제, 겨울 산타축제 등 계절별 관광 콘텐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추경에 5개 시군 규모 사업이 반영됐으나 선거 일정을 고려해 선정 절차는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장수·순창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지역 소비 활성화와 가맹점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는 삼성전자 퇴직 전문가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도 소개됐다. 일부 사업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고 있지만, 전북은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들을 별도로 참여시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제조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는 189개 기업 지원 계획을 추진 중이다.

/0만호 기자